



주간통일정세 2010-44(2010.10.25~10.3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44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北매체, 중국군 참전기념 ‘北·中친선’ 강조(10/25, 노동신문;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의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영원불멸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나라의 면모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놀라운 발전 면모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며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칭찬
- 이 사설은 또 “날로 좋게 발전하는 조·중친선의 협조관계는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떠밀어주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전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면서 “조·중친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
- 평양방송은 ‘조·중친선의 길 위에 새겨진 숭고한 우의’라는 제목의 별도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조·중친선의 전통은 오늘 두 나라 영도자들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로 계승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
- 민주조선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중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 노력에 의해 더욱 공고·발전될 것”이라는 요지의 사설을 실음.
- 조선중앙TV는 1983년 제작된 47분 분량의 중국군 참전 기록영화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24일 오후 방영한데 이어 25일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안녕히 가시라 전우들이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내보냄.

##### ● 中 귀보송, ‘북·중 혈맹’ 거듭 강조(10/25, 신화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귀보송(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24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기념식에서 북·중 관계가 피로 맺어졌음을 거듭 강조
- 통신에 따르면, 귀 부주석은 이날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를 참배한 뒤 60년 전 인민지원군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돕기 위해 압록강을 넘었다면서 이들이 흘린 피가 확고한 북·중 우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함.
- 특히 고 김일성 주석의 보살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로 열사



모가 잘 관리됐다면서 이날 추모식은 역사를 기억할 뿐 아니라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뜻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어 양국 국민이 기성세대가 다져놓은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양국의 번영, 평화, 안정에 더욱 이바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열ся모 참배에는 중국 방북단과 함께 북한의 최창식 보건상, 이영철 노동당 국제연락부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 귀 부주석 일행은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헌화하기도 했음.

### ● 北김정은, ‘총탄보다 식량이 중요’(10/25, 요미우리신문)

- 신문은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권 후계자로 떠오른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과거에는 식량이 없어도 총탄이 없으면 안됐지만, 현재는 총탄이 없어도 식량이 없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노동당 간부들에게 배포된 내부 문서에 실림.
- 신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인 김 부위원장은 “우리 국토는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다. 다만 우리에게 수령(고 김일성 주석)의 복, 장군(김 위원장)의 복이 있다. 대대손손까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세습에 관련한 발언도 했다고 전함.

### ● 김정남, 세습반대 발언으로 목숨 위협해질 수도(10/25, 연합뉴스)

- 통신은 만 13년간(1988~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요리사로 일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가명)씨가 김정남의 세습 반대 발언과 관련, “공공연히 권력세습에 반대하고 ‘북한’이라는 호칭을 쓴 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하다”면서 “북한에서 (이런 김정남을) 위협하게 여겨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후지모토씨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정남 대 김정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북한에선 공화국이나 조선이란 말을 쓰며 김정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이라는 호칭이어서 (김정남 발언을 전해 듣고) 대단히 놀랐다”면서 “별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며, 본인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말한 것 같다”고 설명
- 그는 또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개혁개방을 할 것 같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민들이) 잘 먹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해도 5~6년간은 종전의 정치(선군정치) 방식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 수 없고, 김정은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
- 그는 김정은에 대해 “7살 때부터 접해왔는데 형들하고 놀 때도 항상



- 이끄는 형태여서, 탁월한 리더십이 어릴 적부터 뚜렷했다”고 회고
- 하지만 김정남에 대해서는 “김정일 관저에서 스시를 만들면서 김정일이 마련한 파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지켜봤는데 김정남이 참석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함.
  - 후지모토씨는 이어 “김정은이 공식 등장해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에 김 위원장의 실질적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과 여동생 여정은 있는데 김정철은 없어서 걱정했다”면서 “하지만 김정철은 내가 농구시합 심판을 봤을 때 ‘당신 때문에 졌다’고 항의한 것 외에는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상냥하고 순해 김정은과 잘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그는 김정일 위원장 곁에서 경험한 에피소드와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은 비교적 담담히 밝혔으나 ‘김정남이 망명할 가능성이 있느냐’, ‘북한이 왜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보느냐’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음.
  - 그는 끝으로 “김정은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모두 폐쇄하고 사람들을 석방하길 원하며,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해 납치해간 사람들도 전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면서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김정은이) 꼭 개혁개방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함.
- 北김정일·정은 부자, 中참전60주년 군중대회 참석(10/25,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중국군의 6.25참전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군중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
  - 김정은이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60주년 열병식과 경축야회 이후 15일 만임.
  - 방송은 군중대회에 김 위원장 부자 외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군 총참모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귀보슝(郭伯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군사대표단, 노병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소개
  - 군중대회 보고자로 나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국방위 부위원장 겸 직)은 “조·중친선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패의 친선”이라면서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의지와 염원에 따라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영구불변할 것이며 대를 이어 빛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적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둬들인 경고와 국제사회의 반대를 거역하고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는 선군의 기치 밑에 다져온 자위적 핵 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킬 것”이라고 위협
  - 귀보슝 부주석은 군중대회 연설을 통해 “지금 세계는 평화를 구축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조를 촉진하는 것이 각국 인민의 염원으로 되었다”며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신념



은 변하지 않고 평화를 수호하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유지를 위한 북측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촉구

- 그는 “우리 사이의 친선은 중·조 두 나라 인민과 군대가 피로써 맺은 것이고 오늘의 평화는 중·조 두 나라 인민과 군대의 거대한 희생으로 얻은 것”이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반드시 대대로 전할 것이고 부단히 깊어질 것”이라고 말함.

### ● 시진핑, “6.25참전은 침략에 맞선 정의”(10/25, 연합뉴스)

- 최근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돼 차기 국가주석이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북한과의 혈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 시 부주석은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을 초청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밝힘.
- 시 부주석은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단결함으로써 항미원조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는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함.
- 시 부주석은 “중국 인민은 시종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흘린 피로서 맺어진 위대한 우정 잊어본 적이 없으며 조선 정부와 인민의 관심 또한 잊은 적이 없다”고 덧붙임.
- 그는 “60년 전에 발생한 전쟁은 제국주의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황이 신중국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조선 정부의 요청이 있고 나서야 마오쩌둥 동지는 나라를 지키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 것”며 자국 참전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

### ● 北김정일·정은 부자, 보위부 시찰…이달에 두번째(10/2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 제10215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해, 부대의 임무수행 방식을 이해한 다음 군인들의 훈련을 보셨다”면서 “훈련 결과에 큰 만족을 표시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보도
- 또 “부대 군인들이 계급의 총창(총검)을 틀어잡고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적 전취물인 어머니 조국과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지켜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다”고 덧붙임.
- 통신이 언급한 인민군 ‘제10215군부대’는 인민보안부과 함께 북한의 양대 공안기관으로 꼽히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대외명칭이라고 함.
- 이번 시찰에는 김정은 외에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보위부 제1부부장과 군 장성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김정일, ‘북·중우호 세대계승’ 재차 강조(10/26, 신화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피로 맺은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가 다음 세대에도 계승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
  - 김 위원장은 25일 평양에서 귀보슝(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중 우의는 세대를 거쳐 계승될 필요가 있으며 이 바통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우리 어깨에 걸린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힘.
  - 이어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은 조·중 우의의 중요한 상징”이라며 “우리는 지원군이 피로서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원하고 마오안잉 동지를 비롯한 많은 지원군 장병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후진타오 주석과 쌍방 관계에 관해 광범위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이제는 양국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양국 지도자 사이에 쌓은 공통인식을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한편 이날 접견 자리에 배석함으로써 지난 9일 저우융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면담 참석 이후 두번째로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은 기념 촬영을 할 때 주변인 귀 부주석과 나란히 섭으로써 남다른 위상을 과시
  
- **김정일·정은 부자, 전 중국군사령부 건물 방문(10/2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군의 6.25참전 60주년기념일 다음 날인 26일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평안남도 회창군에 보존된 전 중국군 사령부 건물을 방문하고 중국군 열사묘에 참배했다고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령부 건물 내 작전지휘실, 지하 갯도, 군인회관 등을 둘러보고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두 나라 공동의 역사적 책임이고 중대한 사명”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또 “조·중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의 변함없는 의지와 염원에 따라 전통적인 조·중 친선은 대를 이어 길이 빛날 것”이라면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 인민과 함께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화·발전시켜나 가야 한다”고 강조
  - 이어 김정일 위원장은 또 회창군에 있는 중국군 열사묘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 묘도 참배,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중국) 지원군 열사들이 발휘한 희생정신과 전투적 우의는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공동의 위업을 위해 생명을 바친 지원군 열사의 묘를 잘 관리해 그들의 빛나는 업적이 영원히 전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함.
  -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비롯,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이상 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겸직)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겸직)·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이상 당 비서 겸직), 주규창·우동측(당 중앙군사위원 겸직),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김명국(군 총참모부 작전국장)·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직)·김원홍(보위사령관)·정명도(해군사령관)·리병철(공군사령관)·김영철(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윤정린(호위사령관)이 수행

#### ■ 김정일동향

- 10/25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지휘부 시찰(10/25, 중통)
  - 이영호(총참모장),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군대장) 등 동행
- 10/25 김정일, 10.25 ‘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1950.10.25) 60돌 즈음 ‘우의탑’에 화환 전달(10/25, 중통·중방)
- 10/25 김정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돌기념 군중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0.25, 중통·평방)
  - 김영남·최영림·이영호(정치국 상무위원들), 김정은(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정치국 위원/보고) 등 참석
- 10/25 김정일,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및 여러 대표단들을 만나 담화 및 만찬(10/25, 중통)
  - 이영호(총참모장), 김정은(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강석주(내각 부총리) 등 참가
- 10/26 김정일, 평남 회창군 ‘모안영’墓와 中인민지원군 열사묘에 화환 전달 및 前 中인민지원군 사령부 방문(10/26, 중통·중방)
  - 리영호(총참모장),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비서) 등, 김경희(당 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등 동행

#### ■ 김정은동향

- 10/25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지휘부 시찰(10/25, 중통)
- 10/25 김정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돌기념 군중대회, 평양체육관 참석(10.25, 중통·평방)
- 10/25 김정은,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및 여러 대표단들을 만나 담화 및 만찬(10/25, 중통)
- 10/26 김정은, 前 中인민지원군 사령부 방문(10/26, 중통·중방)





## 라. 사회·문화

### ● 北, 사적 돈벌이 차량 집중 단속(10/26, 데일리NK)

- 통신은 북한 당국이 사적인 돈벌이에 이용되는 기관이나 기업소 소유 차량(일명 ‘씨비차’)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해 물류 적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함.
-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인민보안부(경찰청 해당) 지시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씨비차로 쓰이는 승용차, 승합차, 2t 이하 소형 화물차 등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면서 “교통보안원(교통경찰)들이 길거리에서 차량 등록증, 검사증, 운전면허증을 검사해 차량의 소속 기관과 운전자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인민보안부는 각 도 컴퓨터에 등록된 간부 차량과 사업용 차량만 제외하고 모두 몰수할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군대의 외화벌이 기관들이 갖고 있는 차량도 검열 대상인데 적발된 차량은 경무대(헌병)가 처리한다”고 설명
- 이 소식통은 이어 “노동자가 100명도 안 되는 생활필수품 공장도 모두 씨비차를 굴리며 돈벌이를 하는데 씨비차가 없어지면 당장 중하위급 간부나 이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곤란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도·소매상과 시장을 통해 먹고 사는 일반 주민들도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임.
- 통신은 단속 배경과 관련, “씨비차를 쓰다 보면 황해도 사람이 함경북도 회령까지 이동하는 일도 어렵지 않아, 북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비 사회주의 요소’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씨비차 단속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함.

### ● 北간부, 김정은 생일선물 준비 돌입(10/26, 데일리NK; 열린북한방송)

- 데일리NK는 북한의 간부들이 내년 후계자 김정은의 생일(1.8)에 바칠 ‘충성의 선물’ 마련 경쟁에 들어갔다고 전함
- 매체는 평양의 내부소식통 전언이라며 “청년대장 동지의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당 각 부서는 물론이고 도 당위원회,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1급연합기업소 등이 외화벌이 단위를 총동원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
- 특히 리영호 군 총참모장은 직접 ‘청년대장 동지의 생신에 올릴 선물을 든든히 준비하라’는 특별지시를 군에 하달했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 조선인민군미술창작사에는 ‘선물제작조’가 구성돼 선물의 품목, 비용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매체는 “북한의 해외공관도 조만간 선물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중국 주재 북한 외교일꾼과 외화벌이 일꾼 사이에서는 김정은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함.



- 이어 “북한의 각급 단위들은 통상 김일성 생일(4.15), 김정일 생일(2.16)과 관련 6개월 전부터 선물 제작조를 결성해 선물 마련에 들어간다”며 “내년 1월 김정은 생일까지 시간이 짧아 일부 단위에서는 아예 ‘현금으로 가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임.

● **北사이트, 내부서버로 이전…도메인주소 사용(10/26, NK지식연대)**

- 폐쇄적인 인트라넷 이용에 집중해왔던 북한이 최근 웹사이트 서버를 해외에서 내부로 이전하고 도메인주소를 사용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대외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단체는 ‘조선체신회사’ 간부 서모씨를 인용, “북한이 지난 9일 내부서버를 이용해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던 ‘우리민족끼리’,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는 11월 중에 내부서버로 이전한다”면서 “‘조선외국문출판사’, ‘조선무역’ 등 국제비즈니스 사이트와 ‘조선의 금강산’ 등도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전함.
- 서씨는 또 “지난 8월 20일께 북한에서 최초로 월드와이드웹(WWW)에 접속했다”고 밝힘.
- 북한은 그동안 대남관계자 등 일부사람들에게 IP주소(<http://175.45.179.68>, 조선중앙통신)를 활용한 인터넷에 접속을 허용

● **北, ‘곰 세마리’ 유행…‘3대세습’ 패러디도 나와(10/27, NK지식연대;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에서 남한 동요 ‘곰 세마리’의 가사를 바꿔 김정은 권력세습을 패러디한 노래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NK지식연대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 오산덕중학교 교실과 화장실에서 ‘곰 세마리’의 가사를 “한 집에 있는 곰 세 마리가 다 해먹고 있어 / 할배곰(김일성) / 아빠곰(김정일) / 새끼곰(김정은) / 할배곰은 똥똥해 / 아빠곰도 똥똥해 / 새끼곰은 미련해”로 바꿔 적은 쪽지가 발견됐다고 전함.
- 이 단체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살찐 김정은의 모습을 본 누군가가 남한의 동요로 풍자한 것”이라면서 “보안당국이 즉각 ‘반동유인물’로 규정해 수거한 뒤 출처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쪽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별 뜻 없이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면서 “원산시 해방고등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곰 세마리’ 노래를 부르다가 보안부에 끌려가 밤새도록 매를 맞았다”고 전함.
- 이어 이 소식통은 “당대표자회 이후 김정은 후계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면서 방화 미수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당국이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고 덧붙임.
- RFA 이달 8일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당대표자회 이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새끼돼지 어미돼지(김정일-정은 부자 지칭) 모조





- **북송 장기수들, 김정일체제 선전단으로 활동(10/29, 데일리NK)**
  - 매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현재 북한 '김정일체제'를 선전하는 공연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
  - 매체는 이날 22명의 북송 장기수들이 가족과 함께 북한체제 찬양조의 노래와 연설을 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
  - 이 동영상에서 장기수들은 전원 양복 차림에 훈장을 달고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같은 가사의 노래를 합창하기도 함.
  - 장기수 이재룡(67)씨는 북한에서 맞은 아내와, 김 위원장이 '축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딸을 데리고 나와 '축복받은 나의 삶'이란 노래를 불렀고, 리두균(84)씨는 김 위원장을 영원히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시를 낭송
  - 김중중(85)씨는 강연에서 "(북한에) 오기 전 고향인 경북 안동에 가봤는데 1950년대보다 낙후돼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기도 함.
  - 이들 북송 장기수들은 평양시 평촌구역에 있는 '운정관'이란 공연장에서 한 번에 8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매체는 설명
  -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이나 정권수립일 같은 주요 정치일정을 전후해 해외동포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며칠씩 공연을 한다"면서 "해외동포방문단이 공연을 볼 때는 후원금을 받아 외화벌이도 하고 있다"고 밝힘.

####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대동강 철강공장에서 생산된 '다기능수성철강',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등 여러 대상건설에 이용(10/28, 중통)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유엔사·북한군, 27일 7차 대령급 회담(10/26, 연합뉴스)**
  - 통신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제7차 대령급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힘.
  - 유엔사와 북한군은 지난 7월 15일 1차 대령급회담을 개최한 이후 여섯 차례 회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룰 장성급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함.
  - 유엔사는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평가단을 소집하자는데 입장인 반



면 북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거듭 주장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北지재룡 신임 주중대사 부임한듯(10/2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지재룡이 임명됐다”며 대사 교체 사실을 공식 보도
- 1942년생인 지 신임 대사는 김일성종합대학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뒤 34세 때인 1976년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위원장으로 기용된 인물로 외무성 순회대사를 거쳐 체코와 유고슬라비아 대사에 이어 1993년 1월부터 옛 공산권 국가들과의 ‘당 대 당’ 외교를 전담하는 노동당 국제부의 부부장을 맡아왔음.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지 신임대사가 이번 주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오늘 오전 도착한 인물이 지 대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일본 법무상 등 총련 학교대상 ‘무료화 제도’ 문제점 제기(10/13, 중의원예산심사) 언급 관련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며 비인도적행위”라고 反총련·反北정책 시정 촉구(10/26, 중통)
- 미국의 ‘임계전핵시험’ 성과적 진행 공개는 “미국이 말하는 ‘핵군축’, ‘핵전파방지’는 어불성설이며, 그 누구의 ‘위협’을 입버릇처럼 외우는 것 또한 파렴치한 꾀변”이라고 비난(10/26, 중통·노동신문)
- 김영남, 駐北 덴마크 新任대사 ‘피터 리솔트 한센’ 신임장 접수 (10/27,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핵억제력 보유 정당성 주장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실현 입장 不變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과 美國에 “對北 핵위협 중단 및 6자회담 재개에 성실히 임할 것” 등 요구(10/28, 중통·평방)



### 3. 대남정세

#### [이산가족 상봉 관련]

- 남북적십자회담 첫날…이산상봉 정례화 협의(10/26, 연합뉴스)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26일 오전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시작됨.
  - 단장인 김용현 대한적십자사(한적) 사무총장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은 이틀 일정으로 출퇴근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봉 정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대표단은 또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북측은 쌀, 비료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구. 북측 단장인 최성익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이 이룩되기를 확고고대하고 있고, 이런 견지에서 열리는 적십자회담도 임무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남 온 겨레는 북·남 사이에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고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풀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성의에는 성의로 대화하면서 회담을 잘해서 북·남 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이 회담을 지켜보는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줘야 한다”고 말함.
  - 또한 김용현 단장(대한적십자가 사무총장)에게 “김 수석대표가 뭐 좋은 안을 갖고 왔으면 잘 될 것이고…”라고 언급
  - 이에 대해 김 단장도 “최 단장께서 좋은 안을 갖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실을 위해 열심히 하자”고 제의
  - 김 단장은 “오는 3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지는 이산가족상봉을 앞두고 남북이 이렇게 마주 앉아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데 대해 굉장히 기대가 크다”며 “우리 남측 뿐 아니라 북측 동포들도 상당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함.
  - 이어 “그동안 적십자회담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어느 회담보다 더 좋은 성과와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 北, ‘연 3~4차례 이산가족 상봉’ 제의(10/26, 연합뉴스)
  - 통신은 북측이 적십자회담 첫날에 금강산관광 재개 다시 요구했으며 이에 남측은 월1회 상봉 및 재상봉·고령자 고향방문 촉구했다고 보도
  - 북측은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다시 요구하면서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1년에 3~4차례의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
  - 북측 대표단 최성익 단장은 이날 오전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강산면회소 등 남측 시설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업무와 관련한 당국 간 실무회담이



시급히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

- 북측은 상봉 정례화와 관련, “설과 추석 등 명절을 기본으로 1년에 3~4차례 각각 100명 규모로 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사업도 병행하자”면서 “남북 사이에 필요한 것은 도와주는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자”고 말함.
- 통신은 또 북한이 “현재 중단된 관문점 적십자 채널 복원을 위해서도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전함.

○ **北, 쌀 50만t.비료 30만t 지원 요구(10/27, 연합뉴스)**

- 통신은 북측이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쌀 50만t과 비료 30만t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
-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은 전날 회담에서 쌀 5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 그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이런 대규모 지원은 적십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국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북측 대표단은 우리 측이 어제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쌀, 비료를 제공하면 풀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함.
- 그는 “북측은 아울러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상봉장소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실무회담이 빨리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말함.
- 남측 대표단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25일 남측 지역인 문산에서 차기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
- 회담 관계자는 “차기 적십자회담에 대해 북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차기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북측이 요구한 쌀, 비료 등 인도적 협력사업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 그는 북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요구와 관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물수 조치는 남한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관광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함.

○ **이산상봉 정례화 ‘불발’…내달 차기회담(10/27, 연합뉴스)**

- 남북은 26~2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
- 통신은 다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측이 요구한 쌀, 비료 등 대규모 지원 문제는 오는 11월 25일 차기 적십자회담을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



- 이산가족 상봉 재개…남측 가족 435명 금강산으로(10/30, 공동취재단)
  - 13개월만에 성사된 ‘2010년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0일 북한의 금강산에서 열림.
  - 1차 상봉(10.30~11.1)에서는 북측 방문단 97명이 우리 쪽 가족 435명을 만나고, 내달 2일 하루 쉬고 이어질 2차 상봉(11.3~5)에서는 남측 방문단 96명이 북한쪽 가족 207명을 상봉함.
  
- 남북 이산가족 533명, 금강산서 60년만에 상봉, 전사처리된 ‘국군출신 4명’ 北에 생존(10/30, 공동취재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0일 오후 3시 10분께부터 북한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시작
  - 최종 명단에 오른 북측 상봉 신청자 97명과 남측의 가족 436명은 가족별로 배치된 테이블에 앉아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으며 남북 이산가족들은 약 2시간 동안 첫 만남을 가진 뒤 오후 7시부터 우리 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
  - 특히 상봉 장소에 나온 북측 신청자 중에는 국군 출신인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4명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끄.
  - 이들은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국군으로 참전했으나 전쟁 중 행방불명돼 1957년 우리 정부에 의해 일괄 전사처리됐음.
  
-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오붓한 가족 만남(10/31, 공동취재단)
  - 금강산에서 이틀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31일 아침부터 가족끼리 따로 만나 오붓한 시간을 보냄.
  - 하루 전인 30일 첫 만남에서 60년만의 재회로 눈물을 쏟아낸 북측 상봉 신청자 97명과 남측 가족 436명은 가족별로 모여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이산의 한을 풀었음.
  - 오전 9시부터 두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개별 상봉에서 남측 가족들은 생필품과 의류, 손목시계, 의약품 등이 든 선물보따리를 북측 가족에게 전하였으며 북측 상봉 신청자들은 술과 가족사진, 도자기 등을 담은 종이 가방을 가져와 남측 가족에게 선물함.
  - 낮 12시부터 금강산호텔 2층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이산가족들은 배로 빛은 북한의 백로술과 봉화맥주, 인풍포도술을 서로 권하며 즐겁게 식사한 후 오후 4시부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1층 대연회장에서 두시간 동안 다시 단체상봉을 진행
  - 상봉 첫날 저녁에도 이산가족들은 남측이 주최한 환영만찬을 함께 하며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가족 만남을 이어감.

- 北, “남측, 군사회담 거부 결과 통감할 것”(10/2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북 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이 최근 남측이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안을 거부했다면서 “대화 거절로 초래되는 북남 관계의 파국적 후과(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 이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10월 22일 쌍방 군부가 이미 이룩한 군사적 합의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군사실무회담을 갖자고 남측에 제의했다”면서 “그러나 남측은 함선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북남 군사적 합의 이행 문제의 ‘불명확성’을 운운하며 회담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힘.
- 이 대변인은 또 “북남 관계를 돌이켜보면 쌍방 관계가 극도에 달했을 때도 회담 제의 자체를 거부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쌍방 합의이행을 공공연히 회피하는 남측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대는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신문,李大통령 ‘北비핵화’ 발언 비난(10/30,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을 강조한 데 대해 “반통일적 낫두리”라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꿈은 조국의 평화통일이고 그 첫 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이라고 말함.
- 신문은 이날 ‘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낫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집권세력이 ‘비핵화’를 떠드는 것은 결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반공화국 핵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북남관계는 개선될 수 없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

■ 기타 (대남)

- 北, “남북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現 남북대화 분위기 고수 이행’ 강조(10/25, 중통·노동신문)
- 統一部 長官의 對北발언(핵문제해결 없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불가능)을 “핵문제를 구실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거부하려는 보수패당의 속심을 대변한 것”이라며 ‘동족대결정책 철회’ 촉구(10/25, 중통·노동신문)
- 南 육군참모총장의 국회 국정감사 ‘주적’ 등 발언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깨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호전적 망발”이라고 비난(10/26, 중통·민주조선)
- 南北 적십자회담 진행(10/26~27, 개성), 남측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문제 토의만 고집, 인도주의 협력사업 활성화문제는 외면 한다”고 주장(10/27, 중통 10/28, 중방)
-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과 개성관광재개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南 보수패당은 ‘北 급변사태’ 망발을 늘어놓으며 자유민주



주의체제下 통일야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지속비난하며 反정부투쟁 선동(10/28, 평방)

- 南당국이 ‘남북적십자회담(10.26)’에서 “우리(北)의 금강산관광재개 노력까지 걸고들며 상봉행사는 안 해도 좋다고까지 하는 불순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주장(10/28, 중방)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한일중 정상 “6자회담, 회담 위한 회담안해”(10/29)

-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들은 29일 북핵 6자회담과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관계 진전을 할 수 있는 회담을 하기로 했음.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대우 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문제를 만들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다시 6자회담을 열고 이런 것이 관계 진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회담이어야 하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견에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 김 대변인은 “일본은 북한이 당 대표자대회를 통해 권력체계 프로세스가 시작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으며 6자회담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고, 중국은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으며, 한국이 두 의견을 종합해 정리했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의 지지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라는 대목은 한국에서 먼저 나온 것이고 3국간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중국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됨.
- 그러나 원 총리는 회의에서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서는 안된다. 본 지역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다소 원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중국의 실질적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 “중·러도 ‘先남북대화-後6자회담’ 동의”(10/29)

-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남북한간 의미있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하고 있다고 정보당국 핵심관계자가 29일 밝혔다.
- 이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이 먼저 의미있는 대화의 물꼬를 튼 뒤에



야 6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컨센서스(동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6자회담 의장국이면서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는 지금까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고수해왔음. 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남북간 대화를 먼저 열어 북한 핵 문제의 물꼬를 트자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됨.
- 한미 양국 정부는 이 같은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방안을 놓고 중국, 러시아 정부와 내밀한 이견 조율을 거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으면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 관계자는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담은 어떤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6자 회담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이 당장 핵개발 프로세스 중단과 같은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와 관련, 우리 측이 북한에 내놓을 수 있는 제안으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핵시설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주목되는 ‘하노이 외교전’..김외교 4強 연쇄접촉>(10/28)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8일 오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음. 취임 후 첫 공식외교 무대에서 서는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強)의 외교장관과 연쇄접촉을 갖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 김 장관의 연쇄회담은 무엇보다 교착상태인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특히 양제츠 외교부장은 양자회담에서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보폭을 맞춰온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26일(현지시간) EAS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회동과 관련해 “남북 직접 외교와 6자회담 재개 전망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듣고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협회 초청행사에서 “미국은 6자 회담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

-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열릴 김 장관과 클린턴 장관의 양자회담에서도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이 자리에서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6자회담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다만 김 장관은 27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 기존 입장을 재강조할 것임을 시사했음.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EAS 정상회의 기간에 캠벨 차관보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
- 아울러 김 장관은 4개국 외교장관들과 내달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양자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임. 우선 중국과는 천안함 사건 이후 긴장수위가 높아진 협력관계를 다지고 김정은으로 후계구도 변화 이후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임. 김 장관은 또 29일 오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 조선왕실의궤 반환 문제를 협의하고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그는 오는 30일에는 클린턴 장관과 회동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다루는데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 ● “북한, 핵비확산·감축 F학점” <美군축협회>(10/28)

- 북한은 핵무기 관련 기술 및 미사일 기술을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핵심 국가이며, 아시아와 중동에 확산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국가라고 미국의 군축협회(ACA)가 27일 밝혔음.
- 군축협회는 이날 발표한 ‘핵비확산 및 군축에 대한 진전 평가:2009~2010 성적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해 낙제점인 F학점을 부여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ACA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핵보유국 및 핵보유가 의심되거나 핵 개발을 추진중인 전세계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F학점을 받은 곳은 북한이 유일함.
- ACA는 “북한은 조사대상 기간에 거의 모든 비확산과 군축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2009년 5월 핵장치를 실험했고,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했으며, 이웃 국가들에 대해 핵위협을 하고 민감한 기술의 확산을 계속했다”고 밝혔음.
- ACA는 북한의 경우 과거 12년 사이에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



- 이며, 추가 핵장치 실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음. 이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미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 ACA는 또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시리아에 대규모 핵(개발) 지원을 했고, 이란과 파키스탄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물질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군축협회는 ▲핵실험 금지 ▲핵물질 생산 중단 ▲핵무기 보유량 감소 ▲선제공격배제 선언 여부 등 10개 부문에서 각국의 활동을 기준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음.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우 10개 부문 중 7개 부문에서 F학점을 받았고, 3개 부문에서 D학점을 받았으며, 전체적으로는 낙제점인 F학점을 받았음.
  - 북한 이외에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가 D학점을 받았으며,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각각 C-(마이너스) 학점을 받았음. 이번 조사에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B학점을, 중국과 러시아는 B-(마이너스) 학점을, 인도는 C+(플러스) 학점을 각각 받았음.
  -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군축협회의 피터 크레이일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외교 “北비핵화 입장 별다른 변화 없어”(10/27)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북한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그 이후 언급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은 말이 아닌 행동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6자회담 재개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접촉을 통해 정부는 남북간 진정한 대화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중, 6자회담 정례화 제안”<교도>(10/25)

-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할 경우 매달 한차례 정기적으로 열자고 제의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8월말 방일시와 9월초 방미시에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한국 천안함 침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 후의 협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신은 우 대표가 8월 하순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측의 반응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음. 중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과 다른 참가국 간의 관계가 악화돼 다시 장기간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됨.

#### 나. 미·북 관계

##### ● 美 객 프리처드, 금주중 평양 방문(10/31)

- 미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에 미 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낸 객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금주중 방북함. 외교소식통은 31일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프리처드 소장이 북한의 초청으로 다음달 2~3일께 방북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리처드 소장 이외에 3~4개 학자그룹도 이달중 연쇄 방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프리처드 소장의 방북은 민간학계 차원의 방북 형식을 띠고 있지만 최근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려는 관련국들의 미묘한 움직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가 북·미 양국의 입장을 간접 타진해보는 메신저 역할을 할 지 주목됨. 특히 프리처드 소장은 방북 직후 우리나라를 방문,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방북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또 핵군축 전문가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도 조만간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할 것으로 전해졌음. 이밖에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도 별도의 방북을 추진 중임.

##### ● “美외교관, 조만간 北과의 대화 전망 언급”(10/28)

- 미국 외교관 중 일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리처드 루거 미 상원의원이 27일 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루거 의원은 이날 미 외교협회(CFR) 초청 행사에 연사로 참석,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 루거 의원은 미국이 6자회담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우리 외교관 중 한명을 지난주 만났는데, 그는 조만간 어떤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게 줬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낙관론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또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의 하나는 금융제 재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 김정은 외에 다른 세력도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듣고 있다면서 확실한 전망은 내놓지 않았음.



● 美특사 “北, 유엔 인권보고관 방북 허용하라” (10/26)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열악하다면서 북한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음.
- 킹 특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정부가 다루스만 보고관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방문을 허용하며,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킹 특사는 “(비릿 문타폰) 전임 보고관이 두차례의 임기중 북한 방문을 허가받지 못한 것은 통탄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그는 또 지난해 북한의 화폐 개혁과 장마당(시장)에 대한 단속으로 기본적 필요품들을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공급하는 것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다루스만 보고관에게 요청했음.
- 그는 “미국은 탈북자들의 곤경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송환되는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과 투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 다루스만 보고관의 전임인 태국 출신의 비릿 문타폰은 보고관 재임 6년간 한 번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음.

● 美 “北, 국제적 인권기준 준수해야”(10/26)

- 미국 국무부는 25일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했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정치적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이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실은 북한이 자신들의 주민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여러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 그는 “주권 국가는 주민들의 필요를 위해 봉사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음. 이 밖에 그는 한미 양국이 실시키로 했던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훈련 일정을 재검토중이라면서 자세한 언급은 피했음.

다. 중·북 관계

● 北中 변방도시 교류 활기..“경협 모색”(10/29)

-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 60주년(10월 25일)을 맞아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우의를 과시하는 가운데 양국 변방 도시 간



-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신광렬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표단이 지난 27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를 방문, 린뮈(林鐸) 하얼빈시장 대리와 만나 ‘우호 교류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얼빈시가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9일 밝혔다.
  - 하얼빈은 고(故) 김일성 주석이 1930년 동맹휴학을 주도했다 체포돼 옥살이를 한 뒤 도주해 한때 머물렀던 곳이며 동북항일연군(聯軍)의 동지로, 깊은 우정을 나눴던 천레이(陳雷) 전 헤이룽장성장의 고향이어서 북한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음. 지난 8월 중국을 방문, 김 주석의 혁명 유적지를 둘러봤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하루를 묵어 눈길을 끌기도 했음.
  - 린 하얼빈시장 대리는 북한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군 6.25 참전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우의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도시가 다방면에서 우호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음.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대표단도 지난 25-27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를 방문, 덩쿤(鄧昆) 연변자치주 홍십자회 부회장 등과 만나 중국 홍십자회의 재해 지원 자금 모금 방법 등을 확인하고 연지(延吉)와 룡징(龍井)을 방문해 재해와 재난 대비 태세 등을 시찰했음. 연변주 정부는 지난 2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적십자회의 방문 소식만 언급했지만 신의주 등 울여름 수해가 컸던 북한을 지원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앞서 지난 18일 북한의 선봉기술총회사 김동식 사장이 인솔하는 북한의 과학기술사업 대표단이 단둥(丹東)을 방문, IT산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 선봉기술회사는 이번 방문 기간 단둥의 한 IT업체와 소프트웨어 단지 개발과 IT산업 인력 양성, 기술 교류 및 경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음.
  -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중국을 방문, 베이징과 상하이를 둘러봤던 북한 시.도당 책임비서 12명도 귀국길에 사흘 동안 지린(吉林)과 창춘(長春), 하얼빈, 단둥(丹東) 등을 순회하며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양국 변경도시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두 번째 방중 이후 북한의 동북지역 방문이 부쩍 늘었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 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그러면서 “북한이 본격적인 대외 개방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 인력 파견이나 위탁 가공무역 등 외화벌이가 가능한 낮은 단계의 경험에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음.



● 中투먼 호시무역 ‘개점휴업’..北 소극적(10/28)

- 북한과의 민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 투먼(圖們)시가 개장한 호시(互市)무역시장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 28일 투먼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장식을 한 투먼 호시무역시장이 보름째 운영되지 않은 채 개점휴업 상태임. 개장 첫날 100t가량의 북한산 냉동 오징어가 반입돼 판매된 이후에는 북한산 물품은 물론 북한 상인들도 들어오지 않고 있음.
- 투먼의 한 주민은 “오늘(28일) 장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오후 늦게까지 열리지 않았다”며 “개장 첫날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투먼시는 개장 당시 매주 2회 호시무역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히면서 1인당 8천 위안(134만 원) 이하의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우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북중간 민간 교역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했음.
- 그러나 북한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에 장이 열리지 않아 투먼 호시무역시장이 중국의 의도대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실제 지난 13일 호시무역시장 개장식에도 박송렬 투먼시 서기 등 중국 측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지만 북한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음.
- 투먼에 주재하는 한 교민은 “민간 교역을 통제하는 북한은 애초 호시무역시장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호시무역시장 개장 역시 북한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 측이 ‘판을 벌여 놓고 보자’며 일방적으로 연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간 교역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투먼 호시무역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점휴업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하는 투먼은 호시무역시장 개설 이외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나와 일할 수 있는 ‘북한 공단’을 조성하는 등 대북 교역 확대를 꾀하고 있음.

● “北권력이동 준비작업차 대사교체”<中매체>(10/27)

-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중대사 교체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관영 차이나테일리가 27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최병관(崔炳寬) 전 대사가 임기 6개월만에 지재룡(池在龍) 대사로 바뀌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래지도자로의 권력이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북한의 정례적인 정치적 결정일뿐이며 북중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관영매체의 이런 분석은 지 신임대사가 지난달 28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사실상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후계로 공식화한 김정은의 측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 실제 최 전 대사는 김 위원장의 외교분야 복심으로 불리는 강석주 부총리의 측근으로, 지 신임대사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김정은을 보좌할 핵심세력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주변인물로 알려졌다. 장성택은 김 위원장의 매제임.
- 중국 공산당교의 장렌구이 교수는 “북한의 주중대사 교체가 북중 관계에 주는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중앙민족대학 한국연구소의 황여푸 교수는 “북한이 주중 대사를 바꾼 것은 미래 지도자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북중 우호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분석했음.
- 황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한의 제3대 지도자(김정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 北김정일·정은, 전 중국군사령부 건물 방문(10/2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군의 6.25참전 60주년기념일 다음 날인 26일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평안남도 회창군에 보존된 전 중국군사령부 건물을 방문하고 중국군 열사묘에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령부 건물 내 작전지휘실, 지하갱도, 군인회관 등을 둘러보고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북중)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두 나라 공동의 역사적 책임이고 중대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또 “북중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의 변함없는 의지와 염원에 따라 전통적인 조중 친선은 대를 이어 길이 빛날 것”이라면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일 위원장은 또 회창군에 있는 중국군 열사묘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 묘도 참배했음.
- 김 위원장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중국)지원군 열사들이 발휘한 희생정신과 전투적 우의는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공동의 위업을 위해 생명을 바친 지원군 열사의 묘를 잘 관리해 그들의 빛나는 업적이 영원히 전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방문과 참배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비롯,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이상 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중수·김평해·문경덕



- (이상 당 비서 ”), 주규창(우동측(당 중앙군사위원 ”)이 동행했음.
- 또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김명국(군 총참모부 작전국장)·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보위사령관)·정명도(해군사령관)·리병철(공군사령관)·김영철(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윤정린(호위사령관)도 수행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 ● 北지재룡 신임 주중대사 부임(10/26)

- 지재룡(池在龍.68) 신임 주중 대사가 26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했음. 고려항공 정기운항일인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주중 북한 대사관의 1호 차량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으며 지 대사는 도착 직후 이 차량 편으로 시내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음. 지 대사는 부임 소감 등을 묻는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지은 채 전용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음.
- 지난 4월 부임했다가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 최병관(崔炳寬) 대사 후임인 지 신임 대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이미 아그레망을 받았으며 25일 평양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참전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1942년생인 지 신임 대사는 김일성종합대학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뒤 34세 때인 1976년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위원장으로 기용된 인물로 외무성 순회대사를 거쳐 체코와 유고슬라비아 대사에 이어 1993년 1월부터 옛 공산권 국가들과의 ‘당 대 당’ 외교를 전담하는 노동당 국제부의 부부장을 맡아왔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지 신임 대사는 2004년 초 장성택이 ‘분과 행위자’로 몰려 숙청될 때 함께 지방으로 내쫓기기도 했지만 불과 2년 뒤인 2006년 초 원래 자리인 당 국제부 부부장으로 복귀하기는 등 권력의 부침을 겪기도 했음.
- 앞서 최 전 대사는 지난 주중에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일부 외교 사절에 이임 인사를 하고서 지난 23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 대사들은 최소 10년 이상씩 근무를 해 왔다는 점에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의 갑작스런 대사 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주목하고 있음.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지재룡이 임명됐다”며 대사 교체 사실을 공식 확인했음.

#### ● “新압록강대교 착공 지연·北中갈등 소문도” <RFA>(10/26)

- 북한과 중국 간 ‘실크로드’가 될 ‘신(新)압록강대교’ 공사가 예정 시점이 도래했는데도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다.
- 이 방송은 복수의 ‘중국내 소식통’을 인용, “올해 10월 착공하는 것



으로 알려졌지만 신압록강대교의 건설 예정지인 귀먼(國門)만 지역 어디에서도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 기미가 없어 착공 지연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다”고 밝혔다. 방송은 또 이 다리의 개발 효과를 기대하고 단둥 임항(臨港)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에 투자했던 중국인들이 공사 지연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작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때 북중 양국은 이 다리 건설에 합의했고, 올해 2월에는 평안북도 룡천시와 단둥의 랑터우(浪頭)진 귀먼(國門)만을 연결해 길이 20.4km, 폭 33m의 왕복 4차선 현수교로 건설한다는 내용의 협정도 체결됐음.
- 단둥시의 자오롄성(趙連生) 시장은 협정 전달인 1월 제14기 단둥시 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신 압록강대교가 올해 10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음.
- 착공 지연과 함께 나도는 소문 중 하나는 북한 측이 당초 룡천으로 계획됐던 다리의 시발 지점을 동북방 1~2km의 류초도(柳草島, 경제특구 개발 예정지)나 위화도(威化島, 중국기업에 개발권 임대)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룡천은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철산군 동창리와 가까워, 협의 단계부터 북한은 룡천보다 위화도를 원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 이 방송은 또 “새 다리를 놓으면 개방의 바람이 밀려들 수 있어 처음부터 북한은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같은 이유로 차일피일 착공을 미루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 중국은 1937년 건설된데다 단선(單線)인 압록강철교(단둥~신의주 연결)로는 교역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 2007년 초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다리를 놓자고 제안, 작년에야 북측의 동의를 이끌어냈음.

#### ● 김정일, ‘북중우호 세대계승’ 재차 강조(10/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피로 맺은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가 다음 세대에도 계승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평양에서 귀보슝(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중 우의는 세대를 거쳐 계승될 필요가 있으며 이 바통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우리 어깨에 걸린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음.
- 김 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은 조중 우의의 중요한 상징”이라며 “우리는 지원군이 피로서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원하고 마오안잉 동지를 비롯한 많은 지원군 장병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후진타오 주석과 쌍방 관



계에 관해 광범위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이제는 양국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양국 지도자 사이에 쌓은 공통인식을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델로의 전환을 천명한 중국 공산당 17기5중전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중국의 역사는 그간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은 중국의 나라 사정에 부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접견 자리에 배석함으로써 지난 9일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면담 참석 이후 두 번째로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은 기념 촬영을 할 때 주변인 귀 부주석과 나란히 섭으로써 남다른 위상을 과시했음.

### ● 北김정일, 中고위군사대표단 만나·김정은 배석(10/2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5일 귀보송(郭伯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배석했는데, 지난 9일 김 위원장과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면담 참석 이후 두 번째로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돌에 즈음하여 호금도 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형제적 중국인민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셨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이 통신은 “곽백웅 부주석은 김정일 동지께 보내온 호금도 동지의 친절한 인사를 전달하고 대표단이 마련해온 선물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면담에는 북측에서 리영호 군 총참모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등이 배석했음.
- 또 중국 측에서는 왕하이(王海) 중국인민해방군 전 공군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 노병대표단, 려국여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도 고위군사대표단과 함께 김 위원장을 면담했음. 김 위원장은 이들과 면담을 마친 뒤 만찬을 함께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했음.
- 만찬에는 면담 참석자 외에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참석했음.

### ● 시진핑 “6.25참전은 침략에 맞선 정의”(10/25)

- 최근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돼 차기 국가주석이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북한과의 혈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시 부주석은 25일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을 초청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밝혔음. 시 부주석은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단결함으로써 항미원조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는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음.
- 시 부주석은 “중국 인민은 시종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흘린 피로써 맺어진 위대한 우정 잊어본 적이 없으며 조선 정부와 인민의 관심 또한 잊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음. 그는 “60년 전에 발생한 전쟁은 제국주의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황이 신중국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조선 정부의 요청이 있고 나서야 마오쩌둥 동지는 나라를 지키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자국 참전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좌담회 직전 모습을 드러내 참전 노병을 격려하고 기념 단체사진을 찍었지만 곧바로 행사장을 떠나 좌담회는 시 부주석이 주관했음.
- 한편 이날 관영 신화통신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전 60주년 기념 특별 코너를 개설하고 한국전쟁 사진과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는 등 중국 언론매체들은 항미원조 60주년을 비중 있게 보도했음.

#### ● 北김정일.정은, 中참전60주년 군중대회 참석(10/25)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5일 중국군의 6.25참전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군중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김정은이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60주년 열병식과 경축야회 이후 15일 만임.
- 군중대회에는 김 위원장 부자 외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군 총참모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귀보슝(郭伯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군사대표단, 노병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통신은 소개했음.
- 군중대회 보고자로 나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국방위 부위원장 겸 직)은 “조중(북중) 친선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패의 친선”이라며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의지와 염원에 따라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영구불변할 것이며 대를 이어 빛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또 “적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둬낸 경고와 국제사회의 반대를 거역하고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는 선군의 기치 밑에 다져온 자위적 핵 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킬 것”이라고 위협했음.
- 귀보슝 부주석은 군중대회 연설을 통해 “지금 세계는 평화를 구축하





- 민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 평양방송은 또 ‘조-중친선의 길 위에 새겨진 숭고한 우의’라는 제목의 별도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조-중친선의 전통은 오늘 두 나라 영도자들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로 계승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중앙통신도 노동신문 사설을 요약해 전했다. 중국의 발전상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음. 이 통신에 따르면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중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 노력에 의해 더욱 공고발전될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실었음.
  - 조선중앙TV는 1983년 제작된 47분 분량의 중국군 참전 기록영화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24일 오후 방영한데 이어 25일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안녕히 가시라 전우들이여’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음. 중앙TV는 편성표를 통해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8월 방중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것임을 예고했음.

#### ● <北김정은 후계체제 첫 중국대사 지재룡은 누구?>(10/25)

-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된 이후 첫 중국 대사를 맡게 된 지재룡 당 국제부 부부장은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당 대 당’ 외교에 깊숙이 관여해온 북한 외교의 ‘간판 주자’임. 1942년생(68세)인 지재룡은 김일성종합대학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뒤 34세 때인 1976년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위원장으로 기용됐다. 2년 뒤인 1978년 리영수(現 당 근로단체 부장 추정)한테 위원장직을 넘겨주고 외무성으로 자리를 옮겼음.
- 외무성 순회대사를 거쳐 체코 대사(1982년)와 유고슬라비아 대사(1986년)를 지낸 뒤 1993년 1월부터 옛 공산권 국가들과의 ‘당 대 당’ 외교를 전담하는 노동당 국제부의 부부장을 맡아왔음. 특히 전임 당 국제부장 김양건이 2007년 3월 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옮긴 때부터 올해 1월 김영일이 새 국제부장으로 올 때까지 2년10개월간 지재룡이 사실상 부장직무를 대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후계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국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지재룡이 중국 대사로 발탁된 배경에는 후계자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통하는 장성택(김정일 위원장 매제.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함.
- 지재룡은 대학 졸업 후 사로청에 들어와 위원장까지 오르면서 당시 당 청년사업부 과장이던 장성택의 지시를 받아 청년층에 후계자 김정일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일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런 과정을 거쳐 ‘장성택 라인’에 흡수된 지재룡은 2004년 초 장성택이 ‘분파행위자’로 몰려 숙청될 때 함께 지방으로 내쫓기기도 했지만 불과 2년 뒤인 2006년 초 원래 자리인 당 국제부 부부장으로 복귀했음.
- 이런 인연 때문에 지재룡은 9.28당대표자회에서 급부상한 최룡해



(당 비서), 리영수(당 부장), 문경덕(당 비서 겸 평양시 당 책임비서)와 함께 ‘장성택 사단’의 ‘사로청 4인방’으로 꼽히기도 함.

- 북한 전문가는 “옛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에 전문성을 갖춘 지재층은 앞으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라. 일·북 관계

### ● 日민주, 조선학교에 반일 교육 개선 요구(10/31)

-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조선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경우 ▲조선학교가 반일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 ▲ 무상화를 위한 취학지원금이 학생의 수업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요구했음.
- 민주당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극대화했다’는 기술이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 하는데 반대 의견이 많은만큼 무상화의 적용 조건으로 교육내용 등을 문부성이 점검할 것을 요구했음. 문부성은 11월 초순 고교 무상화 대상의 기준을 정식 결정할 예정이며,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음. 문부성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한뒤 교재의 기술을 수정하도록 학교측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임. 또 취학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재무관련 서류를 해마다 제출토록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고교무상화 대상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도 새로 포함할 계획임.

### ● 日외상 “北 권력승계 성공 불확실”(10/26)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25일 “북한의 권력승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세이지 외상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가진 회견에서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음.
- 그는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김정일이 중앙무대에서 사라진 뒤 김정은이 실제로 권력을 성공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세이지 외상은 북핵문제에 언급, “물리적으로 북한은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며 “이를 강행할지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음.



## 마. 기타

### ● “WFP 사무총장 11월2~4일 방북” <VOA> (10/30)

- 조셋 시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11월 2일부터 4일 까지 방북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WFP 사무총장의 방북은 지난 2005년 12월 제임스 모리스 사무총장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라면서 그는 방북 기간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을 만나고, WFP가 지원하고 있는 평양 인근의 어린이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런 사무총장은 방북에 앞서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취약 계층 아동의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에서 근무하는 WFP 직원들을 만나고 나 스스로 직접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의 실상을 보고,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 한편 VOA는 시런 사무총장의 이번 북한 방문은 지난 2월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 4월의 마거릿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그리고 5월에 있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제네바 본부를 총괄하는 라시드 칼리코브 국장에 이은 올해 4번째 고위급 유엔 인사의 방북이라고 설명했다.

### ● 싱가포르, 대북 무역제재 강화(10/29)

- 세계적인 중계무역항인 싱가포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핵 장비와 미사일 재료, 사치품의 대북 교역을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싱가포르 세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무역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역 금지 사치품에는 담배와 플라즈마 텔레비전, 모터보트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동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최근 보도에서 싱가포르의 대북제재 법령이 시행되면 금융분야와 함께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도 규제대상이 된다고 전한 바 있음. 싱가포르는 아울러 저농축 우라늄과 탱크, 대포, 군함 등 무기의 대(對)이란 교역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세관은 지난해 총 교역량 가운데 북한, 이란과의 거래 비중은 0.4% 미만이었다고 덧붙였다.

### ● 加, 대북제제조치 곧 추가 발표(10/28)

- 캐나다가 대북제제조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로런스 캐년 연방외무장관이 곧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캐나다 통신(CP)이 27일 보도했음.
- 이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리는 캐년 장관이 북한과의 제한적인 외교관계를 더욱 격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올해



초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 등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 조치들은 천안함 사건 뒤 취해졌음.

- 당시 캐나다 해군은 다국적조사팀에 3명의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격침됐다고 결론을 내렸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 “한미FTA 재협상 안돼..비준안 조속처리”>(10/31)

- 한나라당은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논의를 위한 한미간 회담이 시작되면서 정치권 내 재협상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재협상 불가론’을 밝혔음.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협의는 재협상이 아니며,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한미 FTA가 야당의 선명성 경쟁에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한미 양국간 진행 중인 FTA 추가협의를 재협상으로 비치는 것을 적극 차단, FTA 논쟁 재점화를 차단하고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읽힘.
- 정부측도 이번 협의가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은 상태임.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미간 합의된 FTA 본 협정 내용은 변경이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임.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지난 2007년 FTA 체결 이후 달라진 부분을 처리하는 기술적 절차만 남았다”며 “본문이 건드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한·미 양국의 FTA 추가협의를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서의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이명박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면담에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 정부간 FTA 협의 마무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G20 정상회의 이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점쳐짐. 안 대변인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이 FTA의 중심에 서 있고, 우리로서 FTA는 핵심전략”이라며 “추가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며, 현 상황에서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음.

#### ● 클린턴 美국무 “G20前 한미FTA 정부협의 마무리”(10/30)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밝혔음.

-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중인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미FTA 문제가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 대통령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이같은 의견 교환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FTA 문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됨. 한미FTA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협정이 체결됐으나 추가 협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발효되지 않고 있음.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또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중국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되고 늦어지더라도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음.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아울러 북한 핵 문제 등 양국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략적 고위협의를 확대해나갈 것을 제의했음.
-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특별한 답변이 없었으나 양국 간 늘 이런 협의가 있었던 만큼 일반적인 제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의 클린턴 미 국무장관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배석했음.

#### ● <클린턴 “한미동맹은 ‘린치핀’ 이상”>(10/3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linchpin)”이라고 말했음. 린치핀은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핵심이나 구심점, 요체라는 뜻을 담고 있음.
- 토론토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한미동맹에 대한 이 같은 언급은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격상된 언급이라는 평가가 당시 적지 않았음.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표현을 사용, 일본보다 한국과의 동맹을 더 중시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음.
- 지난 9월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 외교협회(CFR) 초청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한국 다음 순서로 언급, 일본 언론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적도 있음. 한미동맹에 대해 클린턴 장관이 다시 ‘린치핀’이라고 언급했음. 게다가 이번에는 린치핀 이상의 관계라는 말도 했음.



- 국무부가 2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클린턴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가진 미국의 대(對)아시아전략 관련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제는 심지어 그것(린치핀)을 넘어서고 있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이 재건팀을 보내고, 아덴만에서는 해적 퇴치 임무에 미군과 공동으로 나서고 있는 사실 등을 거론한 뒤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우리 양국은 활발한 경제적 관계도 즐기고 있으며, 이는 우리 두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까지 한미 FTA 미해결 쟁점을 해소할 것을 요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지난 9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언급한 뒤 나온 일본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한 탓인지 이날 연설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일본을 한국에 앞서 제일 먼저 언급했음.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서는 “외부세계와의 관여를 통한 완전한 혜택을 보장받는 유일한 하나의 길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재건하고 6자회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백악관 “한미FTA, 오바마 방한 핵심 주제”(10/29)

- 미국 백악관은 2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제가 내달 10-12일 진행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핵심 주제(major subject)’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베이더 보좌관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서울 G20(주요20개국) 행사를 계기로 내달 1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베이더 보좌관은 한국의 G20 유치와 관련,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함께 한국이 세계적인 무대로 진출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또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친 뒤 10일 방한하며, 11일에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전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한미 정상은 실무 오찬을 함께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재향군인의 날(베테랑스 데이)과 겹치는 이날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예정임. 로즈 부보좌관은 연설 내용과 관련,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한국이 어느 때보다 국력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베이더 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국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때에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연설에서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베이더 보좌관은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에 언급, “북한은 현재 권력 이양기에 있으나, 초기단계로 보인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권력승계 전후 어느 시점에 하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내부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 샤프사령관 “한국전쟁은 北의 남침”(10/27)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6일 6.25 전쟁은 북한의 침략에 의해 발생한 전쟁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샤프 사령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최근 6.25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참전이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음.
- 그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침공에 의한 전쟁이었다”면서 6.25 전쟁은 전세계가 함께 북한의 침공을 막아낸 전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벌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범위의 일들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 ● “美, FTA 구체적 의사표시엔 협의해 공개”(10/27)

-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7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 통상장관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와 관련, 미국 측의 구체적인 의사 표시가 있으면 미국 측과 협의해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 안 조정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미국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며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국민적인 관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협의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그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한·미 FTA 협정이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그동안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오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FTA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접촉을 가졌음.



### ● 韓美 통상장관, FTA 협의 첫 공식 접촉(10/27)

-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2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접촉을 가졌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처에서 만나 양국 간 쟁점을 놓고 5시간에 걸쳐 회담했음.
- 양국이 지난 5월 한·미 FTA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열어 내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뒤 양측 통상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됨.
- 한·미 통상 장관들은 27일 오전 중에 다시 만나 한 차례 더 협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김 본부장 일행은 27일 오후 대한항공 편으로 귀국할 예정임. 앞서 김 본부장과 최석영 FTA 교섭대표 등 일행 7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한항공 KE023 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음.
- 김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와 만나 “곧바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 서서히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며 “양국이 타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잘 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 기간이 짧은 만큼 곧바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열리는 것”이라면서 “미국 측 요청으로 회의 장소와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회의 내용도 차후 미국과 협의를 거쳐 발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부는 지금까지 미국 측이 실무협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일단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검토해 보겠으나 FTA 협정문은 절대 고칠 수 없으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내달 2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통상장관 회의에서 실무협이 타결되거나 급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다만 이번 회의가 양국의 통상 관련 최고책임자가 만남으로써 실무협이 공식 시작됐음을 선언하고 향후 실무협이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회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 캠벨 “한미FTA 실패안돼..반드시 성공해야”(10/26)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현안 해결을 위한 ‘최상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 캠프 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범태평양 파트너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래’ 세미나에 참석, 한미 FTA에 대해 “우리는 전략적 차원에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성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 캠프 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까지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를 바라는 아주 확고한 기대를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차원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시기(best possible timing)”라고 강조했다.
- 그는 “미국과 한국 양측이 한미 FTA 진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확고하며, 현재 이를 위한 힘든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한 뒤 양국의 세부적 협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전략적 차원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총체적인 성공이라는 관점에서의 기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캠프 차관보는 “총체적인 성공은 미국과 한국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며 “한미 FTA는 단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 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내달 11,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미 FTA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됨.
- 하원 무역 소위원회 간사인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의원 역시 이날 세미나에서 G20 테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 의회가 내년 상반기 FTA를 승인할 것으로 낙관했음. 그는 아울러 한국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협상 타결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에서 누가 다수석을 차지하느냐와 상관없이 남아있는 쟁점은 흡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말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결키로 했으나 현재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확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임.

#### ● 한미,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키로(10/26)

- 한미 양국은 25일(현지시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의 공동연구에 사실상 합의하고 구체적인 연구 범위, 일정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음.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음.
- 양국은 회의 뒤 “파이로 프로세싱을 포함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연구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해 양국 기술전문가들이 조속히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



표했음.

- 조 조정관은 “사실상 파이로 프로세싱을 공동연구 해 나가는 초석이 논의됐다”면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과 파이로 프로세싱 문제를 ‘투 트랙’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음.
- 파이로 프로세싱은 저장 용량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해 한국이 추진 중인 기술로, 그동안 미국은 경제성과 실용성, 핵확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음.
-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홍남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은 파이로 프로세싱 문제와 관련, “핵확산 저항성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면서 “우리는 핵확산 저항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은 같이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음. 홍 국장은 “양국 전문가 간 협의는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완료 시점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 양국은 이날 1차 협상에서 오는 2014년 3월 만료될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더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은 물론 산업 및 상업적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을 협의했음. 양국은 2차 회의는 내년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에 개최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번 1차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 조정관을 비롯해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아인혼 특보를 비롯해 국무부,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 나. 한·중 관계

### ● <한·중 외교부 대변인 회동..“협력하자”>(10/29)

-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양국 외교부 대변인이 29일 자리를 마주했음.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방한이 계기가 됐음. 마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 곧바로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에 이어 김영선 대변인을 만났음. 두 사람의 회동은 양국 외교부 대변인 교류사업 차원에서 성사된 것이지만 최근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대응기조와 6.25 전쟁의 성격 등을 놓고 양국간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외교가의 주목을 받았음.
- 두 사람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6.25 전쟁의 성격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아예 언급조차 피하면서 양국관계가 부정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음.
- 외교 당국자는 “양측은 한·중관계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나왔을 때 불필요하게 오해되거나 보도돼 언론에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대변인실간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나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양국관계가 긴밀해져감에 따라 특정이슈와 관련해 입장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지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고 다소 시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6.25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두 사람은 현재 양국의 언론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출입기자 상호방문 추진 등을 통해 언론교류도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이 당국자는 “현재 중국은 외신기자가 680명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큰 실정”이라며 “앞으로 대변인과 출입기자단 교류를 정례화하고 정보공유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 마 대변인은 외교부 방문에 이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을 G20 회의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한 준비문제 등을 협의했음.

#### ● 마자오쉬 中 외교부 대변인 오늘 방한(10/29)

- 중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마자오쉬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9일 오후 방한함. 마 대변인의 이번 방한은 한·중 외교부 대변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당시 양국 대변인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마 대변인은 방한기간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 등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외교네트워크 강화 방안과 G20 회의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한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마 대변인은 방한에 앞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은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은 그 역사문제에 대해 일찍이 정해진 정론이 있다”고 밝혀 이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을 지 주목됨. 한편 중국 외교부 출입기자단은 내주중 양국 기자단 교류차원에서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 ● 한·중 “북한 비핵화 위해 긴밀 협력”(10/29)

- 한·중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통상부가 28일 밝혔다.
- 양국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음.
- 양측은 또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위인사 교류 강화와 경제통상협력 확대, 양국민간 우의 증진 등을 통해 ‘한·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양측은 이와 함께 내달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음.

#### ● 北인권단체들 “노벨평화상 류샤오보 석방해야”(10/28)

-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등 북한 인권문제 관련 3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중국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를 석방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음. 이들 단체는 “중국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서구 사회의 음모라며 전면 부정하고 민주화 운동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며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한 패권적 중화주의는 계속해서 전 세계 국민을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중국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외면해 왔으며 매주 150~300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죽음으로 내몰았다. 중국의 민주화 없이는 탈북자 문제 등 한반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의 웨이징성 대표와 일본의 인권단체들을 초청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G20 정상회의 기간인 내달 8~12일 탈북자강제복송의 부당함을 알리고 류샤오보의 조기 석방, 북한의 3대 세습 지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임.

#### ● 中 “‘시진핑 발언’ 중국의 정론”(10/28)

-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은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반박 의견이 나오고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 부주석의 발언이 중국 정부를 대표한 정론(定論)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음.
- 마자오취(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시 부주석이 항미원조전쟁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중국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천명했다”며 “중국은 그 역사 문제에 대해 일찍이 정해진 정론이 있다”고 밝혔음.
- 마 대변인은 이어 “우리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평화공존의 원칙하에 유관 국가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중국은 지역은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 공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 부주석은 항미원조전쟁 65주년 기념일인 지난 25일 참전 노병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좌담회에서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라며 참전 정당성을 주장하고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 ● 사공일, 中 왕치산 부총리와 회동(10/27)

- 사공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이 26일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정상회의 준비 등과 관련된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음. 양측은 G20 정상회의가 좋은 성과를 내도록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 사공일 위원장과 왕치산 부총리의 회동은 지난 23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글로벌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경상수지 관리목표 설정과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 통화절하 경쟁 자제를 골자로 한 코뮈니케 발표후 이뤄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한중 양국간 후속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사공일 위원장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도 별도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부, ‘북·중 혈맹관계 발언’ 주시>(10/26)

-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잇따라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예민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 겉으로는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불쾌감 속에서 발언의 배경과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임.
- 귀보송(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 24일 평양에서 열린 6.25 전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북중 관계가 피로 맺어졌다”고 강조한데 이어,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60주년 기념식에서 6.25 전쟁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규정하고 “양국 인민은 시종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가 흘린 피로서 맺어진 위대한 우정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음.
- 이처럼 중국 최고지도층에서 심상치 않은 ‘혈맹관계’ 복원 발언이 잇따르자 정부 안팎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대두되고 있음. 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시 부주석은 2012년부터 중국을 이끌어갈 최고 실력자인데,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를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북한 편들기라는 측면도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 소식통은 이어 “그동안 중국이 남·북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 발언은 적과 아군을 확실히 구분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정부 당국자들은 내심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으로서 자신들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면서 “다만 최근에 특별한 계기가 많이 마련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



했음. 그는 이어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며 “말보다는 행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쓸쓸할 수 있으나 중국 시각에서는 다를 수 있다”며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발언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8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9월 최태복 중앙위원회 비서의 방중, 지난 11일 저우융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방북 등 북·중 정상회담의 부수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북·중간 혈맹관계는 복원을 뛰어넘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 다. 한·일 관계

##### ● 한·일 “총리담화 성의있게 이행”(10/29)

- 한·일 양국은 29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8월10일 발표한 담화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밝혔음.
- 이 자리에서 일본측은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를 조기에 반환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우리측은 사할린 한인 지원과 유골봉환, 군대위안부 등 과거사 현안 진전을 위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요청했음. 이에 대해 일본측은 총리담화 내용을 성의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양측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한·일 FTA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최근 한·일 원자력 협정문안의 타결을 환영했음.
- 또 정상간 셔틀외교의 재개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음. 양측은 이와함께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현황을 평가하고 6자회담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음. 양측은 특히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앞으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음.

##### ● 여야의원, 日자민당에 사할린한인 지원요청(10/25)

- 국회 사할린포럼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자유선진당 박선영, 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의 다니카기 사다카즈(谷垣 禎一) 총재를 만나 러시아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의 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임.
- 이 의원 등 여야의원 30여명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사할린 포럼’을 창립했고, 사할린 한인지원을 위한 일본의원연맹 설립과 한일양국 기금조성 등을 목표로 의원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한국강제병합 사죄담화’를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일본 의회가 사할린한인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자민당 총재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의원 등은 24일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기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고, 다니카기 총재를 면담한 뒤 귀국할 예정임.

#### 라. 미·중 관계

##### ● “위안화 환율, 年3~5% 인상가능” <中인민은행>(10/31)

-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1년에 3~5% 정도 평가절상할 수 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31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 겸 칭화(淸華)대 중국-세계경제 연구센터 주임인 리다오쿠이(李稻葵) 교수를 인용해 보도했음. 리 교수는 2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제재법안이 통과되면 그로인해 위안화 환율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음.
- 그는 “중국내 수출기업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위안화가 통제된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절상되고 있다”면서 “그간 경험으로 볼 때 위안화 환율이 연간 3~5% 가량 평가절상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지난 6월 중순 (1달러당 6.83위안으로 묶여온 고정 환율제인) 달러 페그제를 관리변동 환율제로 바꾸면서 지난 29일 현재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6.6908위안에 달해 그간 2.1% 절상됐다”고 소개했음. 그는 이어 “중국은 3년 내에 경제구조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수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대외적인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음.
- 이 포럼에서 칭화대의 위안강밍(袁鋼明) 연구원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향후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상 폭은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연간 5%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저평가하는 방법으로 자국 수출기업에 사실상 보조금을 줘 세계무역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가절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다음달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위안화 환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아울러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하려다가 여러가지 국내외 정치·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일단 연기했음. 근래 미 하원은 중국을 비롯한 환율조작 의심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 中, ‘희토류 수출’ 美에 확약(10/30)

- 중국이 미국에 대해 휴대전화나 미사일 등 첨단·전략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稀土流)의 원활한 수출과 공급을 약속했음.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30일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국가회의장(NCC)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측으로부터 희토류의 원활한 수출 약속을 받았다고 AP통신 등이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클린턴 장관이 “희토류 금속의 수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었으며, 중국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음. 소식통은 그러나 이 확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 반면 중국 측은 회담에서 클린턴 장관이 최근 닌타오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다시 강조하며 일본 편을 든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음. 양 부장은 닌타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재강조하면서 미국이 고도로 민감한 닌타오 문제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 양 부장은 클린턴 장관에게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어떤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을 만나 닌타오가 미국의 방위 의무가 규정된 미일 안보조약 5조 대상이라며 일본 지지 입장을 천명했으며, 이달 28일에도 하와이에서 마에하라 외무상을 다시 만나 “우리는 일본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입장을 재확인했었음.
-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마자오취(馬朝旭) 대변인도 29일 밤 홈페이지에서 “중국은 클린턴 장관의 유관 발언에 엄중한 관심과 함께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닌타오는 예부터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중국은 이에 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전 EAS 기조 연설을 통해 미국은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영토 분쟁에 미국도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고 강조한 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자유 항행(抗行)과 자유 교역은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다”고 역설한 뒤 “해양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 관례에 기초해 이를 평화롭게 해결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개입



할 의지를 피력했음.

- 클린턴은 중국이 분쟁 당사국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이고 구속력을 수반한 행동수칙을 마련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할만하다고 밝혔음. 베트남 순방을 마친 클린턴 장관은 이날 중국 하이난도(海南島)를 방문해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만나 남중국해상의 도서 영유권 분쟁,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 내년 1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 中 “클린턴 ‘미일안보조약’ 재강조 불만”(10/30)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다시 강조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음.
- 중국의 이런 입장은 29일 하노이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에 나온 것으로 30일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예정된 클린턴 장관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 면담을 앞두고도 냉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마자오취(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밤 홈페이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중국은 클린턴 장관의 유관 발언에 엄중한 관심과 함께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다오위다오는 예부터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중국은 이에 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마 대변인은 “미일안보조약은 냉전 시기의 산물로서 일본과 미국 사이의 쌍방 간의 조약이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 정부와 인민은 결코 다오위다오를 이 조약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국과 일본 쌍방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유리한 일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중일 간 다오위다오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을 만나 다오위다오가 미국의 방위 의무가 규정된 미일안보조약 5조 대상이라며 일본 지지 입장을 천명했으며, 이달 28일에도 하와이에서 마에하라 외무상을 다시 만나 “우리는 일본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입장을 재확인했음.
-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을 순방 중인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하이난다오에서 다이 국무위원과 만나 내년 1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요코하마(橫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 등 현안에 대한 협의할 예정임.



● “美中, 경상 목표치 설정 기반 합의” < FT >(10/27)

- 미국과 중국이 내달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목표치 설정에 합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인용해 27일 보도했음.
- 신문은 ‘중국이 G20 목표들에 공감을 보였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자 칭화(淸華)대 중국-세계경제 연구센터 주임인 리다오쿠이(李稻葵) 교수를 인용해 지난주의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담에서 명목 환율의 “표면적인 이슈”에 관한 논의를 “세계무역 균형 재편의 실체에 관한 협의”로 이행시키는 “좋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리다오쿠이는 파이낸셜 타임스 회견에서 “중국이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겁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런 조정을 하기 위해 정치 및 경제적으로 잘 준비돼있다”고 말했음.
- 신문은 중국이 그간 위안화를 급격히 절상시키라는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저항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리다오쿠이가 인민은행 정책 입안자가 아닌 자문역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G20 경주회담에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4%의 경상수지 목표치 설정을 중국이 지지한다는 점을 시사했음을 주목했음.
- 리다오쿠이는 “G20 (경주) 회동 결과에 매우 고무됐다”면서 “이제는 두 정부(미중을 의미)와 다른 정부들이 (경상수지 목표치 설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중국의 몇몇 경제 매체들도 중국 당국이 그 정도 수준의 흑자 목표치 설정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음.
-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 중국 당국이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치 설정 제의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거의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인민은행의 이강(易綱) 부행장도 2주 전 GDP 대비 흑자율을 향후 3-5년 4%로 낮출 목표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음.
- 신문은 중국이 과거 외부로부터의 목표치 설정 압박에 통상적으로 저항했지만 내부적인 경제 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목표치를 설정해 적용해왔음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음.

마. 미·일 관계

● 美·日, 하와이 인근서 미사일 요격 실험(10/28)

- 미국과 일본이 28일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공동으로 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음. 이번 실험은 지난해 10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묘코(MYOKO)함이 하와이 카우이섬 인근 100마일(160km) 상공에서 표적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지 1년만에 이뤄지는 것임.
-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 장착된 일본 구축함이 미군과의 협력하에 요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 등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보여주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지난 98년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미사일방어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음.

#### ● 美日외교장관 “희토류 공급원 다양화해야”(10/28)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회담에서 희토류 공급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힐러리 국무장관과 마에하라 외상은 이날 오전(일본시간) 호놀룰루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 자리에서 힐러리 국무장관은 “(희토류를) 하나의 공급원에 너무 의존하면 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공급이 끊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가 공급원 다변화에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에하라 외상은 “일본과 미국이 긴밀히 공조해서 다각적인 자원의 교류를 벌여야 하며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이날 회담에서 힐러리 장관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환영했고,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서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범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 두 외무장관은 미일 동맹의 심화와 오키나와(沖繩)의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를 같은 오키나와내 헤노코(邊野古)로 옮기기로 한 지난 5월 미일 공동성명을 재확인했음.

#### 바. 중·일 관계

##### ● 클린턴-다이빙귀 회담..큰 성과없어(10/31)

- 미국이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로 가열된 중국-일본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나섰으나 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아시아 7개국 순방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중국 남부의 하이난(海南)을 방문해 중국 외교 실무사령탑인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과 2시간30분 가량 회담했으나 핵심 사안인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이견을 봉합하지 못했음.
- 이날 회동은 클린턴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까운 하이난 썬야(三亞)공항으로 이동해 공항 VIP라운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댜오위다오 중일 갈등 이슈를 포함해 위안화 환율, 미중 무역갈등,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음.



- 클린턴 장관은 다오위다오 문제는 물론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해양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이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클린턴 장관은 하이난 방문에 앞서 하노이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한) 주권 문제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섬들이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양국 안보조약 의무의 일부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중일간 안정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미국은 중일 양국이 해양분쟁 과정에서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또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앞서 지난 30일 하노이 방문에서 클린턴 장관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다오위다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중국-일본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이를 즉각 환영했으나 중국은 즉답을 피했음.
- 클린턴 장관은 양제츠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도 다오위다오는 미일 방위조약에 명기된 방위义务的 일부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항해와 상업활동의 자유는 미국의 국익이라면서 해양분쟁은 국제 관습법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대해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런 고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언동에 조심해야 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오해를 일으킬수 있는 언론 발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음.
- 이런 가운데 AP와 AFP 등 서방언론은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하이난 방문은 중국에게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해결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으며, 신화통신은 다오위다오 중일 갈등은 거론하지 않은 채 양국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해 다른 시각을 보였음. 한편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은 클린턴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희토류 금속과 관련해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음. 클린턴 장관은 다이빙귀 국무위원과의 회담을 마치고 전세계 편으로 다음 순방지인 캄보디아로 향했음.

#### ● 日 언론, 정상회담 거부 中 ‘소인외교’ 비판(10/31)

- 일본 언론은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국제 외교계에 충격을 준 중국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인 외교’라고 비판했음.
- 아사히신문은 31일 조간 사설에서 중국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대국(大國)에 어울리지 않는 어른스럽지 못한 외교”라고 꼬집었음.



- 이 신문은 미국 국무장관이 ‘센카쿠가 미일 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한 발언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의 교섭 재개에 일본과 중국이 합의했다’는 외국 통신사의 보도를 중국이 문제삼아 정상회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일관된 미국의 입장이고 외국 통신사 보도는 내용이 잘못돼 정정기사가 나간 것으로 중국이 회담을 거부한 것은 내부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내에서 반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공산당 내에 뿌리깊은 반일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일본에 약하게 보이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에서 “중국이 국내 대일 강경파의 반발을 두려워해 이유가 되지않는 이유를 들어 정상회담을 회피했다”고 비판하고 “이번 회담 거부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상대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고 지적했다.
  - 이 신문은 “중국이 10분간의 비공식 회담에 응하면서 공식 정상회담을 거부함으로써 중국 이질론(中國 異質論)이 더욱 확산되게 됐다”면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음.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중국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상회담을 거부함으로써 악화된 외교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그 배경에는 대일 정책을 둘러싼 중국 지도부 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5월 일중 정상회담에서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조약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던 원자바오 총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중국이 정상회담을 거부하면서 ‘일본 측이 회담 분위기를 깬다’고 밝힌 것은 책임이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밝힌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日총리 “日中 결정적 트러블 아니다”(10/31)**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島>) 문제로 촉발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결정적 트러블’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총리는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는 긴 역사를 함께해 왔다”면서 “오늘날 발생한 다소의 트러블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견줘볼 때 결정적인 트러블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중 양국이 냉정하게 대처하면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더욱 더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간 총리는 중국의 일방적 거부로 공식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원자바오 총리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의장 대기실에서 10분간 회동한 것과 관련 “양국은 이후에도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는 것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지향한다는 기본엔 변화가 없다”면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협력하는 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 간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29일 예정됐던 공식 정상회담이 무산된 뒤 3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의장 대기실에서 10분간 만나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략적 호혜관계의 추진에 노력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 함으로써 '파국'을 피하려는 모습을 연출했음. 일본 언론은 간 총리가 회의장 대기실에서 다른 나라 정상과 환담을 나누고 있을 때 원자바오 총리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즉석 회동이 이뤄졌다고 전했음. 하지만 중국의 주요 언론은 원자바오 총리와 간 총리의 비공식 회동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음.

### ● 美, 日中에 3국 외교장관 회담 제안(10/3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문제로 틀어진 일본과 중국의 갈등을 풀기 위한 미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음. 미우 리신문 등에 따르면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미중일 3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제의했음.
- 클린턴 장관은 양제츠 외교부장과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의 긴장 완화를 위해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미국이 중개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의 제안에 대해 일본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양제츠 외교부장은 즉답을 피했음. 클린턴 장관은 센카쿠 문제와 관련, 중국 측에 “이 섬이 미일 방위조약에 명기된 방위구역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음. 이에대해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런 고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언동에 조심해야 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오해될 수 있는 언론 발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음.
- 클린턴 장관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항해와 상업활동의 자유는 미국의 국익이다”고 강조하고 “해양 분쟁에는 국제 관습법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 ● 日, 일중 정상회담 취소(10/29)

- 일본 정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가 열린 29일 일중 정상이 만난다고 한 발표를 취소한다고 밝혔음.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지 한 시간 후 취재진을 만나 “일본 대표단은 오후 6시35분 일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애초 발표가 틀렸음을 공포한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세부 내용까지는 모른다고 전했음. 앞서 일본 외무성은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중인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날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음. 양국은 지난달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등과 관련, 관계가 급랭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만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책 도출이 기대되던 상황이었음.

### ● 中-日, 이번엔 ‘센카쿠 접속수역’ 신경전(10/25)

-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두고 또 입씨름을 벌였음.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어업지도선 2척이 센카쿠열도 부근 해역을 지나간 데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께 센카쿠열도의 한 섬인 우오쓰리지마(魚釣島) 북북서쪽 약 33~37km 해역을 중국 어업지도선인 ‘위정(漁政) 202호’와 ‘위정 118호’가 지나가는 것을 해안보안청 순시선이 발견했음. 중국 어업지도선은 일본 측으로부터 영해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오후 10시30분께 이 해역을 떠났음.
- 중국 배가 지나간 곳은 영해(해면에서 12해리)가 아니라 접속수역(영해에서 12해리)임. 원래 영해를 벗어나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라고 해도 외국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각국이 영해 밖에 접속수역을 정해놓고 출입을 규제하고 있음. 일본은 센카쿠열도와 12해리 영해가 일본 소유인 만큼 중국 배가 접속수역에도 함부로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밝힌 셈임.
- 앞서 중국 농업부 산하 어정국(漁政局)은 센카쿠 해역에 ‘위정 201호’와 ‘위정 203호’에 이어 1천t급인 ‘위정 202호’, ‘위정 118호’와 500t급 선박 등 어업지도선 3척을 추가 투입했음.

### ● <日총리 ‘대중 경계감’..도쿄도 지사는 핵무장론>(10/25)

- 센카쿠(尖閣) 갈등을 계기로 표출된 일본의 대(對)중국 경계의식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음. 25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4일 사이타마(埼玉)현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열병식에서 “중국이 군사력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해양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세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고 중국을 직접 거명해 우려를 표명했음.
- 이는 지난해 10월 부총리 자격으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 대신 해상자위대 행사에 참가했을 때 “중국과 긴밀하게 연계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바뀐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지적했음.
- 간 총리는 또 북한에 대해서도 “미사일이나 핵병기의 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자위대는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항상 갖춰둘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음.



- 그는 미일동맹에 대해 “21세기에 걸맞은 형태로 착실히 심화시키겠다”며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위력을 정비하기 위해 이제부터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방위대강을 연말까지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 열병식은 육·해·공 자위대가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자위대원 약 3천800명, 차량 약 240대, 항공기 약 60대가 참가했음.
- 한편 극우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는 24일 산케이신문 계열의 후지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데, 논의 자체를 거부(금기)시키고 있다”며 핵보유 논의를 촉구했음. 이날 프로그램의 주제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 갈등이었음.
- 이시하라 지사는 “독일은 (일본의) 비핵3원칙 같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않고 미국의 핵을 가져다줬기 때문에 발언력이 있다”며 “미군 사령관은 ‘일본은 너무 멀어서 지켜줄 수 없다’고 한다. 왜 일본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나. 가질 힘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 또 “일본의 군사력을 구사하면 (중국과) 독자적으로 싸워도 (센카쿠 열도의) 제해권, 제공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2,3년 지나면 어찌 될지 모른다”며 자위대 배치를 촉구하기도 했음.

#### ● 中 반일시위 재폭발..10여개 도시로 확산(10/25)

-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중국인들의 반일(反日) 시위가 중국 정부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2주째 이어지고 있음.
- 주말인 지난 23일 쓰촨(四川)성 더양(德陽)시에서 시민 1천여명이 반일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일요일인 24일에는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등 10여개 지방도시에서 반일시위가 벌어졌다고 문화보(文匯報), 명보(明報) 등 홍콩 신문들이 25일 보도했음.
- 특히 란저우시에서는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 200여명이 24일 오전 시내 중심가에 집결해 ‘다오위다오 반환’, ‘일본상품 보이콧’, ‘일본인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고 홍콩 신문들은 전했다.
- 시위대는 일본의 국기에 ‘X’ 표시를 한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확보했으며, 일부 시위참가자들은 일본 국기를 훼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란저우시 공안 당국은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을 출동시켜 1시간여만에 시위대를 해산했음.
- 바오지시에서도 수백명이 ‘일본상품 보이콧’, ‘일당독재 반대’ ‘높은 집값 해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1시간여만에 해산됐다고 홍콩 신문들은 전했다.
- 중국 정부는 일부 반일시위 참여자들이 주택 문제, 빈부격차, 정치



체제를 거론하는 등 시위의 양상이 변질될 조짐을 보이자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음.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반일시위를 주요기사로 다루지 않도록 보도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공안당국은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과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충칭(重慶)시 등의 일본 총영사관에 경찰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 특히 제 16회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광저우시는 반일시위로 인해 치안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반일시위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공안 요원들의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나섰음.

## 사. 기 타

### ● 한국, PSI 정식 운영멤버 참여 확정(10/25)

- 우리나라가 PSI(확산방지구상)의 핵심 기구인 OEG(운영전문가그룹)에 정식멤버로 참여하게 됐다. 외교소식통은 25일 “PSI 주요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의 OEG 가입이 확정됐다”며 “다음달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OEG 회의에서 회원가입이 정식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이 PSI에 가입한 것은 지난해 5월26일로, PSI 가입후 불과 1년 6개월만에 PSI의 중추로 불리는 OEG 멤버로 가입하게 됐다. OEG는 PSI를 이끄는 일종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서 현재 95개국이 참여하는 PSI 운영과정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 PSI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20개국으로 구성된 OEG에는 아태지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고 있음. OEG에 가입할 경우 PSI 운영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불법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존 95개 가입국이 확보한 풍부한 사전정보를 공유하는 효과도 기대됨.
-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OEG 가입은 PSI 활동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PSI 훈련 참여와 활동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